



화물연대 투쟁과 윤석열 퇴진 투쟁은 만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전방위적 탄압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이 이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은 범정부적 파업 파괴 대책본부(재난안전본부)를 구성했고, 각료들은 연일 험한 말을 쏟아내며 저항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업을 지속하면 가중 처벌하겠다고거나,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시켜 버리겠다고거나,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면서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이윤 보호를 우선하느라 노동자들의 생존 외침을 깔아뭉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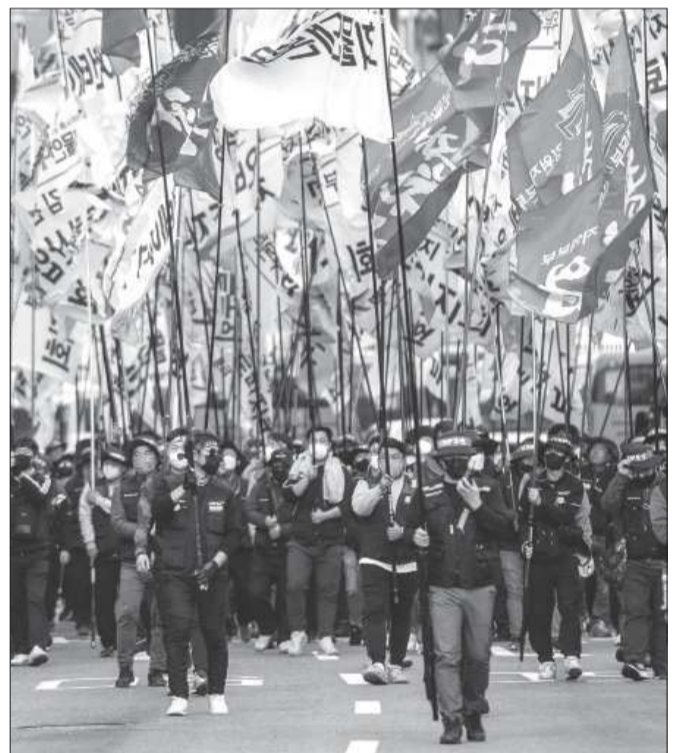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를 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 한파에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생계 수단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비열한 짓거리다.

당장 일부 건설현장이 마비되는 등 파업 효과가 커진 시멘트 운송 분야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됐다. 다른 분야로도 파업 효과가 커지자, 정부는 정유, 시멘트, 컨테이너 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파업이 국가 재난?

열도당토않게도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속에



서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 저항을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견주다니 그 뻔뻔함과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 윤석열이야말로 평범한 청년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비극을 만든 경찰력 외·남용자 아니던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공권력과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가 낳은 비극이다. 윤석열의 경찰력 배치 기본 방침에 따라 그날 경찰은 공안(집회 통제),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실 경비에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서울 중심지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히 확인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화물연대 투쟁과 퇴진 투쟁은 공동의 적을 상대하고 있다

윤석열의 강경 탄압은 이 파업이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윤석열은 취임 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일부 마비되고 정부 지지가 떨어졌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안달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탄압은 정부에 대한 노동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윤석열 퇴진 정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촛불행동'도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하

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했다. 화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퇴진이 답이다" 등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화물연대 투쟁은 화물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내건 투쟁일지라도, 정권의 수장인 윤석열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정부와 사용자들이 모두 달려들 만큼 정치적인 성격이 짙어졌다.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 정세 속에서 세력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가능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화물연대 파업을 흠뻑 지지·엄호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 투쟁은 경제 투쟁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다시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화물연대 투쟁과 퇴진운동은 만나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응원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 참가자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이 운동 안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커다란 지지를 얻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에 맞서 저항에 나섰다. 이에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11월 26일 열린 퇴진 집회에서 <노동자 연대> 독자들은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호소하는 호외를 나눠 주고,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인증샷 캠페인을 벌였다.

호응이 뜨거웠다. 어떤 캠페인 부스에선 인증샷을 찍으려고 줄을 섰다. 가족들이 함께 지지 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어긴 거 아닌가요. 물류를 멈춰서 꼭 이겼으면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응원합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 그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윤석열이 업무개시 명령을 하겠다고 계속 말하던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할 짓인가요? 미친 정부예요.”

“지난번 파업할 때 윤석열이 째짤매는 것 같아서 속시원했고 뉴스 보면서 응원했어요.”



화물연대 투쟁은 서민 생계비 저항을 대표한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화물연대가 “국가 물류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때쓰기나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물류 공급 차질은 오히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이 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흐르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일을 해 왔다. 그런 만큼, 그 물류를 멈춰 세울 힘도 있다.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 경제”, “민생”은

기업의 이윤일 뿐이다. 윤석열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활고에 관심이 없고, 되레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반대로, 화물연대 파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불만을 터뜨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표한다.

이 투쟁이 성과를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화물 노동자들은 보여 주고 있다.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기업주들의 것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고 탄압을 지시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

벌 규정을 개선하라”, “법령 한 줄, 규제 하나에 기업의 생사가 [달렸으니] 경제형벌 규정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생계를 위해 파업한 노동자들은 탄압하고, 기업을 위해서는 있는 법도 바꾸고 없애 주는 게 윤석열의 “법과 원칙”이다.

현 상황에 필요한 것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시너지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우다

12월 7일(수) 오후 8시 15분 개최

bit.ly/meeting-new-1207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정기호에는 ...

화물연대 투쟁, 중국 지역 시위, 윤석열 퇴진 운동을 둘러싼 논쟁, 대장동 수사의 진정한 성격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wspaper.org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